

기본급 99,000원 인상! 산업전환협약 쟁취!
노동자생존권 보장!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쟁취!



2021.06.25.(금)

지부교섭 속보 07호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9차 지부교섭_사측 제시안 없음]

사측 묵묵부답! 교섭 결렬!

교섭 진전시킬 생각 없는 사용자들!

결국 또 빈손교섭!

24일(목) 9차 지부교섭에서도 사용자는 또 빈손이었다. 2주전 7차 교섭에서 첫 제시안이 나온 후 계속 빈손 교섭이다. 그럴싸한 변명조차도 없었다. 그저 “아직 준비를 못했다.”라는 답변이 끝이다. 김정태 지부장은 “여름휴가 전에 끝낸다는 입장에 변함없다. 산업전환협약 수용하면 휴가 전에 끝낼 수 있다.”며 교섭을 진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게 조합원 요구 맞나? 막말까지!

교섭에 빈손으로 나온 사용자들은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에게 훈계까지 했다. 지금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이 정말 조합원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맞냐며 집행부를 위한 요구안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산업전환협약의 핵심은 공동결정이다.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산업전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정하자는 것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생존권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재 사망 유가족 특별채용도 많은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실제 많은 지회가 단협에 쟁취했던 내용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 노동부가 억지를 부리며 강탈해갔던 조항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원상회복하자는 요구일 뿐이다. 일방적 구조조정을 하지 말라는 생존권 요구도 코로나위기, 산업전환의 시기에 조합원들에게 절실한 내용이다. 금속노조의 요구 중에 조합원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다.

교섭결렬! 투쟁돌입!

사용자는 교섭을 진전시킬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다. 9차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단 한차례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교섭 진행은 의미가 없다. 지부는 9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7월 지부 총파업을 비롯한 위력적인 투쟁을 전 사회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9차 교섭 속기록

내 생존권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

사 : 지부교섭 시작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순번이 돌고 있다. 제가 요새 삼국지를 다시 읽는다. 지금 삼국지를 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된다. 삼국의 왕이 삼국통일 목표 하에 4~50년 전쟁했는데 과연 백성들도 그걸 원했을까? 가족들과 농사짓고 장사하며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 중앙, 지부 요구안이 정말 조합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요구일지, 집행부가 필요해서 하는 요구일지 생각이 든다. 조합원들이 간절히 요구하는게 아니라면 노사가 괜한 소모전을 하는게 아닐까? 이틀 전에 중앙교섭이 결렬했다. 오늘은 지부교섭이 결렬될 것 같고 조정신청 들어가는 계획대로 가는데, 노사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원만하게 소모전 하지 말고 마무리하면 좋겠다.

노 : 우리는 여름 휴가 전에 끝내고 싶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 조합원 요구가 아닐 거라고 판단하는 게 사용자 문제다. 나의 생존의 문제를 누가 임의로 결정하고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 못한다. 산업전환도 핵심은 공동결정이다. 나의 일터가 바뀌고 생존권 변화가 오는데 그걸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산재사망 특별채용도 많은 사업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것이다. 어느 가장이 멀쩡히 일하다 돌아가시면 남겨진 가족은 막막하다. 한온에서도 산재사망은 아니지만, 암으로 돌아가신 분 유가족이 막막해서 조합에 찾아왔다. 결국 노사가 합의해서 채용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그걸 고용세습, 인사경영권 침해라고 위헌소지가 있으니 단협에서 빼라고 했다. 정확히 고용세습 아니었다. 현대차도 80년대에 사람

채용하려니 힘들었다. 그래서 회사가 애사심 키우려고 ‘니가 잘하면 아들도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조항이었다. 근데 이제와서 고용세습으로 몰아가면 곤란하다. 인사경영권 침해하려는 게 아니고 노동조건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선 노조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동결정법도 사용자는 인사경영권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엔 노동권이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 요구도 당연히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건데 이걸 인사권 침해라고 본다. 지역의 파산, 도산 사업장 노동자 고용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의미이다. 노력하자는 수준이다. 근데 사용자가 모든 기준을 인사경영권 침해로 보니 안 풀린다. 사용자가 인사경영권을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노동권도 노조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해줘야 한다. 내 삶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노조 만들어진 것이다. 사용자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왜 80~90년대 수용되던 조항이 지금은 안되나? 자기 생존권을 건드리면 노동자는 포기하거나, 앞뒤 안가리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 저는 조합원이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 제시안 있나?

사 : 준비 아직 못했다. 지부장 말 참고해서 의견을 모아서 차후에 제시안 준비하겠다.

노 : 휴가 전에 끝내려면 이렇게 소모적으로 만나면 안된다. 만약에 사용자가 조정신청 후라도 빨리 하고 싶으면 산업전환협약 수용하면 된다. 그러면 휴가 전에 끝낼 수 있다. 이후에 교섭은 7월 마지막에 한번 보는 걸로 하자. 그 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전이라도 안이 마련되면 주셔라.